

기정원 제148회 정기이사회 회의록

1. 회의개요

- 회의일시 : 2025년 12월 23일(화) 10:30 ~ 12:00
- 회의장소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서울사무소 10층 회의실
- 출석임원 : 재적이사 8인 중 7인 참여 및 결의서 제출
 - 의장(기관장) : 김영신
 - 이사 : 황영호, 양찬희, 한선화, 장준연, 최윤희, 함정우
 - 감사 : 정환
- 불참임원 : 이정원
- 보고안건
 - (제1호) 제147회 이사회 개최 결과보고
 - (제2호) 비상임이사 변동사항 보고
 - (제3호) 2025년도 국정감사 수감 결과 보고
 - (제4호) 2026년도 정부위탁사업 현황 보고
 - (제5호) K-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 이관계획(안) 보고
 - (제6호) 2025년도 상생협력기금 출연 및 집행 현황 보고
- 심의안건
 - (제1호) 중장기(2026년~2030년) 경영목표(안)
 - (제2호) 2026년도 예산 및 운영계획(안)
 - (제3호) 2026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(안)
 - (제4호) 인사규정 일부 개정(안)

2. 안전 보고·심의 결과

○ (보고안전 제1호) 제147회 이사회 개최 결과보고

- 요지 : 제147회 이사회 상정안전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
- 의견 : 없음
- 결론 : 원안접수

○ (보고안전 제2호) 비상임이사 변동사항 보고

- 요지 : 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관」 제5조(임원의 구성), 제8조(임원의 임기)에 따라 신임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황영호 이사 선임
- 의견 : 없음
- 결론 : 원안접수

○ (보고안전 제3호) 2025년도 국정감사 수감 결과 보고

- 요지 : '25년도 국정감사 수감결과, 틱스사업 지원체계 개선 및 제조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한 2건의 지적사항 발생 및 조치 현황 보고
- 의견 : 제조데이터 표준화 사업의 핵심 장비 표준화 관련 설명자료 요청
- 결론 : 원안접수

○ (보고안전 제4호) 2026년도 정부위탁사업 현황 보고

- 요지 : '26년도 정부위탁사업은 29개, 2조 6,435억원으로 '25년 1조 8,409억원 대비 8,026억원 증가(43.6%)

* (R&D사업) 17개, 2조 1,456억원 / (비R&D사업) 12개, 4,979억원

- 의견 : 없음
- 결론 : 원안접수

- (보고안건 제5호) K-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 이관계획(안) 보고
 - 요지 : 「K-바이오랩허브구축사업」 구축사업 한시조직 기한만료 및 업무 지원기관 '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' 지정에 따른 사업단 이관 계획 보고
 - 의견 : 사업지연 방지 및 성과제고를 위해 다수의 운영 주체가 참여 하는 특성을 고려해 운영 주체 간 명확한 역할·책임 설정 필요
 - 결론 : 원안접수

- (보고안건 제6호) 2025년도 상생협력기금 출연 집행 현황 보고
 - 요지 : 공공기관·민간기업 등과 중소기업 및 농어업·농어촌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설치된 상생협력기금 출연 및 집행 현황 보고
 - 의견 : 없음
 - 결론 : 원안접수

- (심의안건 제1호) 중장기(2026년~2030년) 경영목표(안)
 - 요지 : 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관」 제33조에 따라 향후 5개년의 기관 중장기(2026년~2030년) 경영목표를 심의·의결
 - 의견 : 없음
 - 결론 : 원안승인가결

- (심의안건 제2호) 2026년도 예산 및 운영계획(안)
 - 요지 : '26년도 기관운영 예산 및 운영계획(안)에 대해 심의·의결
 - * '26년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예산수지 23,490백만원
 - 의견 : 없음
 - 결론 : 원안승인가결

○ (심의안건 제3호) 2026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(안)

- 요지 : 「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」 제6조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4조에 따라 '25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(안) 심의·의결
- 의견 : 안전 경영을 위한 협력업체 및 직원 협의회 운영 시 노동이사 참여 활성화 필요
- 결론 : 원안승인가결

○ (심의안건 제4호) 인사규정 일부 개정(안)

- 요지 : 인사제도 개편 연구에 따른 설문조사 및 노사공동 인사노무 협의체 운영 결과에 따른 전보 기준 명확화를 위한 조항 개정
- 의견 : 순환보직 및 전문직위제 운영, 직급·직책, 보상체계 등 인사·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
- 결론 : 원안승인가결